



독일의 물가상승과 노사 간 임금협상

강하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 머리말

최근 독일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부 철강업계와 항공업계에서는 파업을 통해 인상안이 관철되었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기계·전자업계와 화학업계의 임금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유발된 실질임금 감소를 상쇄하지만, 동시에 물가 재상승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 경영위기에 몰린 사용자와 임금인상안을 고수하는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산업의 노사 간 임금협상 현황과 정부의 지원 내용 및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물가상승 억제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노사 간 임금협상 현황

금속·전자산업

노조의 요구안

최근 독일 금속노조(IG Metall) 이사회는 9월 중순 시작된 금속·전자산업 임금협상에서 약

380만 명의 노동자를 위하여 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¹⁾ 8% 임금인상은 2008년 이후 최대폭이다. 요크 호프만 노조 위원장은 물가상승이 노동자의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과반수는 이전과 같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임금인상이 책임감 있는 임금정책 및 분배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노조가 상황의 유동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가을철 임금협상을 앞두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연관된 경기 침체의 위험이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²⁾

사용자단체의 대응

금속·전자산업 사용자단체(Gesammetall)는 노조가 업계의 상황을 미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슈테판 볼프 회장은 현재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기업의 94%가 대규모 비용 상승을 감당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분을 완전히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업계의 1% 남짓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20%의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약 2만 6천 개 기업 중 특별히 높은 실적을 내는 약 100개 기업을 기준으로 업계의 현실이 정의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³⁾ 그는 이번 협상에서 임금이 동결되어야 정당하며 머지않아 몇 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⁴⁾

파업 가능성

이처럼 협상 당사자들의 분명한 입장 차이로 인해 9월 현재 진행 중인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의 임금협상에는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임금협상에서는 평화의무가 종료되는 10월 29일부터 파업이 가능하다. 금속노조는 이미 2022년 봄 약 6만 8천 명의 북서부 철강 노동자를 위한 8.2%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하여 최근 6.5%로 합의를 관철시킨 바 있다.⁵⁾

1) 금속노조의 발표에 의하면 협상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 될 것이라고 한다.

2) Süddeutsche Zeitung, "IG Metall fordert stärkste Lohnerhöhung seit 2008", 2022.7.11.

3) Tagesschau, "IG Metall fordert acht Prozent mehr Lohn", 2022.7.11.

4) Arbeitgeberverband Gesammetall, "Es würden mehrere Hunderttausend Arbeitsplätze zur Disposition stehen", 2022.8.15.

5) Tagesschau, "IG Metall fordert acht Prozent mehr Lohn", 2022.7.11.

서비스산업

루프트한자 지상직 노동자의 파업

최근 진행된 루프트한자 지상직 노동자의 임금협상에서 노동자 측은 항공 성수기에 노동저항 방안을 쓸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7월 27일 하루 동안 파업이 진행되어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발 여객기 약 1천 편이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다.⁶⁾ 이번 파업은 이미 유럽 전반의 공항인력부족으로 업무지연이 발생한 상태에서 벌어져 여행객에게 큰 불편을 야기했다. 루프트한자의 램코 슈테엔베어겐 전무이사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해 약 3,500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⁷⁾

임금인상 합의

파업 이후 루프트한자 사측과 지상직 노측은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년간 임금인상을 포기한 이후 이루어진 첫 합의로 3단계에 걸친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⁸⁾ 노동자들은 우선 2022년 7월 1일에 소급하여 월 200유로의 고정급을 수령한다. 이에 더해 2023년 1월 1일부터 2.5%가 인상되는데, 월 125유로가 최소 인상액으로 보장된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2.5%가 추가 인상된다.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18개월이다.

한편 루프트한자의 경쟁사인 콘도르 또한 지상직 및 객실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독일 서비스노조(ver.di)에 의하면 이들의 임금은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소 7% 인상되며, 2023년 인플레이션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9%까지 인상이 가능하다.⁹⁾

6) Tagesschau, "Lufthansa streicht mehr als 1000 Flüge", 2022.7.27.

7) Tagesschau, "Lufthansa und ver.di einigen sich auf Lohnerhöhung", 2022.8.5.

8) 이번 합의는 지상직 노동자의 임금에 제한된다. 루프트한자 조종직 노동자들은 9월 초 별도의 파업을 진행하여 월 980유로의 임금인상을 이끌어냈다. 이 합의는 2023년 6월 말까지 유효하다.

9) WirtschaftsWoche, "Condors Lohnplus ärgert Lufthansa", 2022.8.5.

합의안에 대한 반응

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이자 루프트한자 사측과의 협상을 담당한 크리스티네 벨레는 유럽 최대 항공사의 임금협상이 완료된 것에 만족한다며, 이번 인상안이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과 실질적인 임금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 주장한 성과별 임금인상안이 관철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루프트한자의 미하엘 니게만 인사이사는 이번 협상에서 임금체계상 낮거나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특별히 고려된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¹⁰⁾ 서비스노조와 콘도르의 합의는 평화롭게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¹¹⁾

화학산업

독일 광산화학에너지노조(IG BCE)는 2022년 2월 진행된 사측과의 임금협상에서 약 58만 명의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임금인상 대신 각 1,400유로의 일시금을 지급할 것에 합의했다. 이는 당시 추가적인 물가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적인 영향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몇 달간의 과도기를 위한 잠정적인 보상이었다. 임금협상 당사자들은 2022년 10월에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¹²⁾

■ 정부의 노사합의 지원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사회·경제적 영향

노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임금협상의 방향과 결과는 향후 정부의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의 구매력이 높아져 소비

10) Tagesschau, "Lufthansa und ver.di einigen sich auf Lohnerhöhung", 2022.8.5.

11) WirtschaftsWoche, "Condors Lohnplus ärgert Lufthansa", 2022.8.5.

12) Bayerischer Rundfunk, "Chemiebranche gelingt nur ein vorläufiger Tarifabschluss", 2022.4.5.

축진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물가 재상승의 악순환이 야기될 위험 또한 커진다. 임금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소요 사태가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반대하는 시위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물가상승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경우 극우주의자의 선동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작센 주에서는 극우단체인 자유 작센이 대규모의 시민저항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낸시 패저 연방내무부 장관은 극우주의자와 반유대주의 및 음모론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¹³⁾

“협조행동” 모델의 부활

주요 내용

연방정부는 임금인상 문제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으로 인해 임금협상 당사자와의 협동과제가 다시 필요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에 과거 시도되었던 협조행동 모델이 다시 부활했다. 최초의 협조행동은 1967년 당시 칼 쉴러 경제부 장관이 노사 이해당사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성장, 고용 및 물가안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을 일컫는다. 당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기대되었던 것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임금인상을 통해 경제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 모델은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단기적인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¹⁴⁾

회담의 진행

올라프 숄츠 연방총리는 2022년 7월 4일 노사, 연방은행, 정치권 인사 및 학자들을 베를린에 초대하여 협조행동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숄츠 총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가 사회적 갈등의 발화점이 되는 것을 우려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가 연착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담은 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관계자들과 장기간의 대화를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¹⁵⁾

13) Tagesschau, “Droht ein Herbst radikaler Proteste?”, 2022.8.2.

14) Tagesschau, “‘Scholz’ Rückgriff auf die 1960-er Jahre”, 2022.6.1.

15) Spiegel, “Unterhaken, solange es geht”, 2022.7.4.

회담의 결과

이번 회담에서는 현재의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 가정 및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솔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유통망이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라며, 이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달라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¹⁶⁾

회담에 참석한 노사 대표들은 첫 번째 회담에서 어느 정도 일치된 관점을 확인했다.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의 야스민 파히미 위원장과 독일경영자협회(BDA)의 라이너 돌거 회장은 모두 물가상승이 현재의 임금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 현재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높은 임금이 아니라 공급 측면, 즉 높은 에너지 비용, 유통 중단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노측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사측은 임금협상 결과가 추가적인 물가상승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¹⁷⁾

■ 물가상승 대응방안

한편 정부는 협조행동의 진행과는 별도로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시금 지급을 통한 임금인상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안은 지속적인 임금인상 대신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인상분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특히 협조행동 회담을 앞두고 솔츠 총리

16) Süddeutsche Zeitung, “Scholz muss die Jämmernden zusammenbringen”, 2022.7.4.

17) Tagesschau, “Guter Wille, begrenzte Möglichkeiten”, 2022.7.4.

가 노동자에게 비과세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안을 언급한 내용이 보도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안을 현재의 임금협상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보고, 일시금 지급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력 상실을 일부 보전하는 동시에 미래의 임금 비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일자리 상실 위험을 줄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시금 지급안에 비판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가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특히 국가가 이미 개입하여 2022년 최저임금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약 22% 인상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조합 측은 일시금 지급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서비스노조의 프랑크 베어네케 위원장은 “일시금 지급은 물가상승 억제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는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통해서만 완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노동조합연맹 또한 이 안을 거부하며, “장기적으로는 오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과 비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만이 생활비 상승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¹⁸⁾

정부의 부담경감정책과 가격 규제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새로운 부담경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몇 달간 시행된 부담경감정책을 통해 임금협상의 압박이 낮아졌다고 보고 향후 부담경감 정책 역시 이 같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정부가 주도한 주유 할인 또는 9유로 대중교통티켓과 같은 수단은 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물가상승을 늦출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와 지출은 다시 물가상승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가격규제 역시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안은 가스요금 등을 규제하여 최대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부담경감이 정치적으로 유용한 것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이들은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인 공급 부

18) Tagesschau, “Was gegen eine Lohn-Preis-Spirale hilft”, 2022.7.4.

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재화 공급이 계속되도록 노력하는 것¹⁹⁾이 우선순위라고 본다.²⁰⁾

세금 인상 또는 인하 방안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정책 방안 또한 고려되고 있다. 몇몇 경제학자는 세금이 인상되어야 시민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방안은 현재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반대로 세금 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방정부는 가스요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²¹⁾ 기독교사회당은 기본 식료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통근자를 위한 세금공제액 인상안을 제안했다.²²⁾

연방재정부 장관의 인플레이션 조정법

크ристи안 린트너 연방재정부 장관은 2022년 8월 10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조정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핵심은 소득세의 기본공제를 늘리고 자녀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다. 린트너 장관은 소위 “냉혹한 누진세”를 없애고자 한다며, 납세자가 소득 인상에도 불구하고 누진세로 인해 높아진 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결과적으로는 더 적은 세후 소득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²³⁾

그러나 인플레이션 조정법은 사회민주당, 좌파당 그리고 시민단체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독일복지단체연합회는 기본공제액 인상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훨씬 많은 혜택을

19) 예를 들어 로베르트 하벡 연방경제부 장관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부족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20) Tagesschau, “Was gegen eine Lohn-Preis-Spirale hilft”, 2022.7.4.

21) Süddeutsche Zeitung, “Bundesregierung will Mehrwertsteuer auf Gas senken”, 2022.8.18.

22) Tagesschau, “Was gegen eine Lohn-Preis-Spirale hilft”, 2022.7.4.

23) Handelsblatt, “Steuerpläne von Lindner stoßen bei Koalitionspartnern auf Kritik: “Das geht an der Realität vorbei””, 2022.8.10.

가져온다는 점을 들어 이 법이 이미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²⁴⁾

■ 맺음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독일 내 물가상승률은 계속해서 전년대비 7%대를 기록하고 있다.²⁵⁾ 물가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정부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대형노조들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다시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되자, 정부는 과거의 협조행동 모델을 다시 시도하며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물가상승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불안 해소를 협동과제로 받아들이고 성공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LI**

24) Tagesschau, "Lindner stellt seine neuen Pläne vor", 2022.8.10.

25) Die Zeit, "Inflationsrate in Deutschland auf hohem Niveau gesunken", 2022.8.10.